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영저널

THE CRITICAL JOURNAL OF MANAGEMENT AND ECONOMY

모 든 카 피

대구 최대 준공관련 서류, 고속복사, 칼라복사 제본,
청사진, 대형칼라출력, CAD입출력, 각종현황판
(대표 이 덕 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791
TEL: 053)426-8252~3 FAX: 053)426-8251

COVER STORY / 김용수 울진부수
정책제안 / 버스 준공영제 해결책은 없나
기획특집 / 대구시내버스 적자 논쟁
인물FOCUS / 경북도 한명구 사무관 산림청 조관 대통령표창
시사논단 / 청소대행업체 계약 및 업체선정 방식 등 관련법 개정으로 논란
기업탐방 / 한국 대표 의료기기 전문제조회사 메디슨
청호평론 / 되풀이되는 국감 관행 개선돼야
부동산가이드 / 지방부동산 시장 미분양 감소 기지개 펴나

통권 제20호
2009.11

PHOTO ESSAY

가을걷이..

가을걷이를 기다리는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지만 쌀값하락 소식에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황금빛 들녘은 농민의 땀과 눈물. 수많은 아픔과 사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만, 도시인들의 눈에는 그저 아름답기만하다.

글_ 우성덕 취재팀장

Contents

PHOTO ESSAY	02	가을걷이..
NEWS WIDE	04	국·내외 정치 경제의 주요뉴스
COVER STORY	06	김용수 울진군수
정책제안	10	버스 준공영제 해결책은 없나
정책조명	12	지자체, 돈주고 상받기 관행 없어져야
기획특집	14	대구시내버스 적자 눈덩이
인물FOCUS	16	경북도 한명구 사무관, 산림청 주관 대통령표창
시사논단	18	청소대행업체 계약 및 업체선정 방식등 관련법 개정으로 논란
테마산책	20	한국은행 8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향후 전망은
기업탐방	22	한국 대표 의료기기 전문제조회사, 메디슨
개정법규	24	최신 개정법규 소개
이슈&이슈	25	세종시 논란
계약리뷰	26	대구 첨복단지, 연구용역비 과다논란
청호평론	27	되풀이되는 국감 관행 개선돼야
부동산가이드	28	지방부동산 시장 미분양 감소, 기지개 펴나
생활경제	30	금값 폭등, 금은방 된서리
지자체는 지금	32	경북 의성, 경북 영천 대규모 사업프로젝트
리더 추천릴레이	34	(주)SMS EDU 엄태수 대표이사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연 5만원 | **신청방법** T. 053) 766-1368 | **이메일** wsd79@naver.com
성함·주소·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기관일 경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이름 기재)
구독료 납입계좌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주)에코

〈독자투고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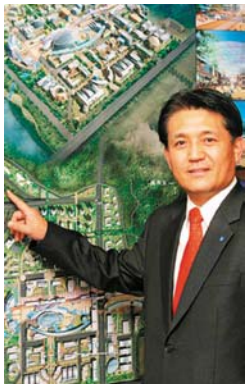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칼럼과 평론 및 현장경험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크기10) 분량으로 경영저널 편집국으로 보내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번지 경영저널 편집국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이메일. chojs333@naver.com

경영저널 www.ecomanagement.co.kr

통권 제19호 | **발행인** 이진구 | **편집국장** 윤일형 | **등록번호** 경북다0123 | **창간** 2007년 11월 5일
편집위원 이준형, 정성민, 강석완, 조종성 **취재팀장** 우성덕 | **기자** 이준혁
서울·경기취재본부 031472-2061 **울산·경남취재본부** 052223-2261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약5길 18 1동 301호 **TEL** 053)766-1368 | **FAX** 053)766-1356
E-mail chojs333@naver.com | **가격** 2,500원 | **인쇄** 삼영정밀인쇄사

'이시아 폴리스' 윤곽 갖추기 시작



대구 동구 봉무동에 조성 중인 복합신도시 '이시아폴리스'가 점차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이시아폴리스(대표이사 류창수)는 지난달 23일 이시아폴리스 현장에서 롯데프리미엄아웃렛이 입점하는 라이프스타일센터의 착공식을 가졌다.

라이프스타일센터는 신개념의 복합쇼핑몰 형태로 쇼핑은 물론 문화체험,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한자리에 모여 쇼핑이라는 단순한 목적 이외에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형 공간으로 개발된다. 이미 이곳에는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의 롯데프리미엄아웃렛 입점이 확정됐고, 올 7월에는 프리미엄 영화관인 CGV의 입점계약이 성사됐다. 라이프스타일센터는 현재 전체 면적 3만1150㎡에 지하 2층~지상 4층, 주차면적만 1150대로 임대비율은 72% 정도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28%의 면적에는 F&B(식음료), 리테일, 문화공간 등이 입점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개장은 2011년 상반기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시아폴리스는 그동안 사업부지 전체를 둘러싼 높은 공사용 가림막을 단계적으로 헐어 시민들에게 단지조성현황을 그대로 보여줄 계획이다. 현재 토목공사가 60% 넘게 진행됐고, 상부시설인 개별 건축물들도 속속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도
"美 과학교육 특수목적교 오송 유치"

의료.우주항공.해양과학을 망라한 미국 과학교육 분야 특수목적학교인 마그넷스쿨이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들어선다. 충북도는 오송 첨단의료단지 투자 유치를 위해 코네티컷주 교육위원회(CREC)와 마그넷스쿨 등과 함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과학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공립 마그넷스쿨이 오송에 들어서면 국내외 과학자와 글로벌기업의 오송 첨단의료단지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CREC 대표단은 오는 12월 방한해 학교 개설 예정지를 둘러보고 충북도의 오송 첨단의료단지 조성 파트너로 의료사업 전문 개발업체인 BMC가 주축이 되는 특수목적법인과 추가 협약을 맺는다. 도는 마그넷스쿨 유치를 위해 오송 첨단의료단지 주변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투자유치단은 이와 함께 보스턴의 'KOCH 통합암센터'를 접촉, 국립암센터 등 국내 병원이 참여한 가운데 암 진료 첨단의료기기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대구 돔구장 2만 5천석 규모 내년 상반기 착공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대구 돔구장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대구시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지난달 29일께 돔구장 건립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날 광주와도 같은 내용의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돔구장 건설에 필요한 4천여억원의 비용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고 대신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상업 및 레저공간 등 복합테마타운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시는 연말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나서, 구체적인 개발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지는 수성구 대흥동 대구 스타디움 부근 대구체육공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곳은 체육시설공원지구이어서 야구장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데다 지난해 1월 발표된 돔구장 건설을 위한 용역 보고서에서도 이곳이 추천됐다. 하지만 주변 지역을 함께 개발하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푸는 절차가 남아있다. 구장 규모는 2만5천석, 최대 3만~3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고, 이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중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시작된 돔구장 건설 사업은 민간자본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표류해 왔다.

경북도
환경시설 확충에 3천727억 투자

경북도는 내년에 3천727억원을 들여 환경기초시설 300곳을 신증설하는 등 하수분야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시설별 투자액은 하수처리장 설치 및 기존시설 개선 1천390억원, 하수관거 정비 1천50억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232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선 205억원 등이다.
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30억원을 비롯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92억원, 분뇨처리시설 설치 38억원, 공중화장실 개선 등에 59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와 함께 강과 댐의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 하수처리장 18곳에 314억원을 들여 총인(T-P) 제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공공 하수도시설을 집중 확충해 현재 68%인 하수도 보급률을 2010년에는 7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 지역 최초
차로 줄여 자전거 도로 개통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기존 차로를 줄여 만든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올해 2월부터 조성에 들어간 자전거 전용도로는 달서대로 신당네거리~대천교 왕복 7.5km 구간 기존 10차로 도로를 8차로로 축소한 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분리 녹지대 등을 설치해 마련됐다. 구는 이번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민 휴식 공간이자 출.퇴근 길로써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11년까지 강창교~신당네거리~계명문화대 2.3km 구간과 성서지역에 추가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 예정이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달 23일 구청 공무원 30여명이 개통을 앞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직접 자전거를 타고 안전성과 주변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을 점검하는 자전거 타기 행사를 갖기도 했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금호강변 등에서 자전거타기 행사를 열 예정이다"며 "성서산업단지와 월배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두바퀴 녹색 여행상품' 개발 추진

경북도가 테마가 있는 자전거 여행상품 개발에 본격 나섰다.
경북도는 낙동강과 동해안, 백두대간, 울릉도 등 빼어난 자원과 신라 유적지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자전거 여행 코스를 '두 바퀴 녹색 여행상품'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도는 자전거 여행객의 성향과 선호도를 집중 분석하고 자전거 마니아의 현장 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과 코스별 자연 및 문화 자원 등 특색을 잘 살린 테마상품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자전거 여행길은 자연풍경, 토속음식, 전통한옥, 문화재, 향토특산물 등 보고 먹고 자고 사는 것을 연계한 코스를 중점 개발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여행테마 설정을 시작으로 자전거 여행지도 작성, 자전거 여행코스답사 및 발굴, 자전거길 시스템 개발, 자전거 마니아를 비롯한 타깃고객 설정, 마케팅, 편의시설 확충 등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COVER STORY

프로필
1940년 경북 울진 출생 / 1958년 서울공고 졸 / 1963년 경희대 법학 졸 / 경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한나라당 경상북도지부 수석 부위원장 / 2002 경북대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울진군수 당선/ 현) 울진군수

김용수
울진군수

'친환경 고장' 울진군이 새로운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있다. 천혜의 청정자원을 기반으로 '환동해 해양과학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올해는 특히,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제2회 2009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울진미래전략산업(U-프로젝트) 구상으로 '살맛나는 고장, 매력있는 울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성장 동력을 내실있게 다져가고 있는 김용수 울진군수를 만나 정책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글/ 우성덕 취재팀장
사진 울진군청제공

1 민선4기 3주년을 맞은 소감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3년간 열성을 다해 뛰어왔습니다. 임기 중 '살맛나는 고장, 매력있는 울진' 이라는 슬로건으로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 등 4대 군정 방침을 정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친환경농업 정책의 적극 추진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이 제고됐고, 지역 성장동력인 해양자원 조성과 첨단해양바이오산업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1조원 규모의 울진미래전략사업(U-프로젝트)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 울진의 백년대계를 설계했습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7번국도 확포장공사 준공과 함께 36번국도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민간비행훈련원을 유치하는 등 지역최대 숙원사업이었던 광역 교통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이제는 '환동해 해양과학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해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 울진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 생태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울진은 산림이 전체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금강송 군락지인 소광리 금강송 숲을 비롯해 불영사 계곡, 덕구온천 계곡, 백암 선시골 계곡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맑고 깨끗한 계곡에는 은어와 연어가 회귀하고 있고, 수달, 산양이 서식하는 우리나라 최대인 왕피천유역은 생태보전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또 청정 동해바다에는 울진대게와 돌문어, 고포미역 등 신선한 해산물이 즐비하고, 대형 공장 등 오염원이 거의 없는 그야말로 청정해양지역입니다. 여기에다 굴뚝 없는 청정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소 6호기가 이미 가동 중이고, 4호기가 건설 예정입니다.

특히, 2003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친환경 유기농업을 역점 사업으로 적극 육성,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지자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이 2003년 86ha에서 작년 말 현재 1,274ha로 21%나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에 이어 올해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제2회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세계 24개국, 국내 129 업체, 전국 51개 기관, 단체가 참가했고 당초 관람목표 100만명을 훨씬 뛰어 넘는 115만명이 관람하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울진의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과 농수특산물의 판로 확보에 큰 성과를 보았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지난 8월 막을 내린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는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지자체 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선 주제 전시관인 '친환경농업관' 을 최첨단 IT기술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또 환경오염 실태와 유기농산물의 필요성을 3D입체 영상으로 구성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생태학습공간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울진대게의 주 산란지인 왕돌초 주변환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울진아쿠아리움', 진딧물을 잡아 먹는 천적곤충인 무당벌레를 형상화 해 건축한 '울진곤충여행관' 등 주요전시관을 새롭게 조성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그루에 1만 5천개가 열리는 토마토 숲, 잉어 우유 먹이기 체험, 피딩쇼, 민물고기잡기 체험, 친환경농산물 수확 체험, 논 생물조사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준비해 가족단위 체험여행의 새로운 트랜드를 제시하면서 눈높이를 맞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사장 안에는 2백~3백년이 넘은 금강송 그늘 아래 벤치 등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행사장 입구에 왕피천의 물을 이용해 생명 수벽을 조성,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행사장을 따라 흐르는 실개천, 분수 등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여름철 신나는 물놀이의 즐거움과 시원함도 제공했습니다. 이외에도 생태터널, 동물농장, 토종 작물원, 유기농 경작지, 야생화 관찰원, 다도체험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한 점도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7번 국도의 부분 개통으로 수도권 등 도심지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해졌고, 국제 유기농업 심포지엄 등 5개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국내외 석학 및 친환경농업 전문가들의 참가와 호응을 유도한 점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뒤에는 무엇보다도 하루 7백여명, 총 2천여명의 도우미와 자원봉사자, 운영요원은 물론 6백여 공직자, 6만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행사를 개최, 적극 도와준 것이 가장 큰 요인일 것입니다.

지자체들 **상 받기** 위해 **혈세** "펑펑"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단체 시상에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나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돈을 주고 상을 받고 있는 셈이다.

_ 우성덕 취재팀장

전국 지자체 시상 홍보비로 연간 수천만원씩 지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 기초단체 131곳이 시상을 위해 지출한 예산이 총 36억여원에 달했다. 지자체마다 평균 1천 352만원 가량을 시상을 위한 홍보비로 사용했다. 5천만원 이상 지출한 지자체도 광역 단체 8곳, 기초단체 14곳 등 22개 기관이었다. 특히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민간단체의 상 종류는 모두 58개로 이 가운데 9개를 제외한 84%가량이 언론사, 언론단체 주최,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A 지자체의 경우 2007년 1천 470만원, 지난해 1천320만원 등 모두 2천 790만원의 예산을 미리 지출하고 상을 받았다. 또 공공기관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해야 하지만 민간주관 시상의 홍보비를 주최, 주관기관의 행사 대행업자에게 편법 지불하는 사례도 많았다. 시상기관에서도 응모, 심사,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건당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요구해 지자체가 이를 홍보비로 지출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1개 상의 여러 부문을 복수 응모해 선정된 후 홍보비로 수천만원을 지출했고, 포상 내역에 해외연수가 있었지만, 실제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포상 연수를 가지 않았는데도 연수비용은 반환받지 못하는 등 예산의 편법 집행 및 낭비가 심각했다. B 지자체는 심사비와 홍보비 모두 1천 650만원 등 수상을 위해 3천 300만원을 지출했고, A 주관사는 2007년 37개 지자체, 지난해 25개 지자체에 상을 수여하면서 행사진행비 150만원, 해외연수비 150만원, 특집방송 제작 및 편성비 350만원, 언론인포럼 신문 광고게제 및 특집제작비 200만원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극히 일부 지자체만 신청하거나 신청만 하면 거의 상을 받은 경우가 많아 상의 영예성,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도 많았다. D지자체는 1개 상의 6개 부문에 응모, 5개 부문에서 수상하면서 5천만원을 수상 홍보비로 지출했다.

대구시 1개에 3천300만원 내고 상 받은 적도 있어

대구 경북지역 일부 단체장들도 지난 2년간 수억원의 예산으로 민간단체가 주는 각종 상들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지난 5월 대구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대구경북지역 단체장들이 수상한 상은 대구시 24개, 대구지역 구군청이 194개(평균 24.3개), 경북도 37개, 경북 시군 607개(평균 26.4개) 등이었다.이 중 구미시(78개), 김천시(74개), 안동시(68개) 등은 연 평균 30회 이상 수상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년 간 지역 지자체들이 참가비, 심사비,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주최 혹은 주관사에 100만원이상 주고 받은 상도 무려 24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별로는 영주시가 6개로 가장 많았고, 안동시, 의성군(4개), 문경시, 영덕군, 대구 달서구(2개) 등의 순이었다. 예산 비용으로는 안동시가 8천 41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주시 6천270만원, 의성군 4천875만원, 대구시 3천300만원, 문경시 2천90만원, 대구 수성구 1천560만원, 대구 달서구 1천8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는 한국능률협회 주관 고객만족경영대상 수상 1번에 3천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심사비로 1650만 원, 홍보비로 165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대구 경실련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상한 상을 빠트리거나 지출 예산을 밝히지 않은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식 수준 이상의 참가비나 심사비를 낸 뒤 상을 받는 것은 '돈으로 상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란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 경실련측은 "단체장 수상이 자신들의 업적을 주민에게 알리는 확실한 근거이자 수단이기 때문에 각종 상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시민 세금과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민간 주관 시상 참여 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주관 시상 참여를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자치단체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예산 낭비를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광고, 홍보비를 지급토록 하고, 한국언론재단은 광고, 홍보비 지급 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편법 지출 등은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수용되도록 시행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모를 제한하도록 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버스 준공영제 늘어나는 적자 대책 마련 '고심'

»»기획특집
_ 우성덕취재팀장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으로 인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서비스 수준이나 대중교통 수요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재정지원금도 해마다 늘고 있다. 대구시는 적극적인 효율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운송 수입금 관리와 재정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버스업체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늘어나는 재정 지원금, 수입 확대 방안은 부족

대구 시내버스의 재정 지원금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수입 확대 방안은 전무하다. 앞으로 도시 철도 3호선까지 개통되면 이용객 감소로 적자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버스 지원금으로 지난 2007년 564억원, 2008년 744억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78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무료 환승객 증가에 따른 적자와 버스 기사 임금 증가 등으로 올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898억원 정도의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총 1천658대로 기사는 3천8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지역 버스 운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2천 800억원 정도였다. 하지만 버스 수입은 연간 2천 100억원에 불과하다. 버스 한 대가 하루 운행하는데 필요한 표준 운송경비 또한 52만3천원 정도지만 하루 평균 수입은 고작 35만원 안팎에 그치고 있다. 최소한 700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 올해 재정지원액도 780억원에 달해 버스 대당 4천 700만원을 지원해야 할 판이다.

무료환승객 증가, 적자 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무료 환승객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무료 환승 금액은 2007년 연간 418억원에서 지난해 480억원, 올해는 528억원 정도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공휴일과 방학기간 중 탄력 배차제 운행 등 원가절감을 위한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료 환승객이 늘고 버스기사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버스기사들의 임금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거리다. 대구 버스기사들의 경우 100% 정규직이다. 하지만 타 대도시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10~15%에 이른다. 게다가 2014년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버스 적자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 따르면 3호선 개통 이후 도시철도의 수송분담률은 현재 9.7%에서 16.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버스 수송분담률은 현재 37%선에서 3.4%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 감축이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해법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빚내 시내버스 기사 월급 줘야해

올해 대구시는 빚을 내 시내버스 기사 월급을 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올해 배정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600억원이 지난 9월에 바닥났지만, 시는 예산 부족으로 10월부터 연말까지 석달 간 지급해야 할 180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시내버스 운영 적자폭 증가로 내년도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올해보다 100억원 정도 늘어난 89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재정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CNG 차량 연료비를 외상으로 한 뒤 113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2개월치 기사 상여금을 유예하는 방안 ▷시의 지급 보증을 통해 개별 버스 회사가 금융권에서 빚을 내는 방식의 재원 마련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연료비 외상과 상여금 지급유예시 5.5%의 이자 지급을 해야 하고, 도시가스가 거부할 경우에는 1억6천여만원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권 대출도 버스업체 신용도가 낮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도입 당시부터 준비 없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 재정 부담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면 버스 이용객 감소가 예견되는 만큼 버스 감축 등 구조조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스운행, 서비스 수준 등 세부적 대책 마련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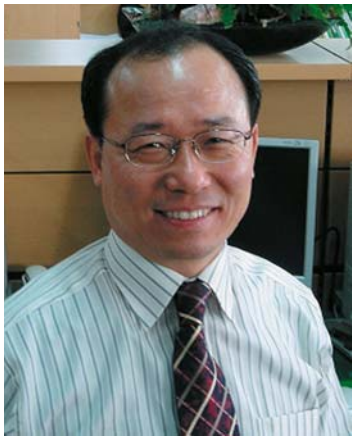
대구시는 현행 준공영제의 틀 안에서 업체 대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체 대형화를 통한 감차와 탄력배차, 주말, 공휴일 감회 운행 등으로 적자폭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구 시내버스 업체는 총 29곳, 업체당 평균 버스 보유대수는 58대로 이는 서울(114대), 광주(95대), 대전·부산(75대)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시는 버스 회사 당 83대 이상이 돼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고속철도 변 정비와 도시철도 3호선 공사로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되되면서 감회나 감차를 하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가져오게 할 소지도 크다. 이로 인해 시는 표준운송원가 중 66.2%가 인건비이고, 연료비가 2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비용을 줄이려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게 최선의 선택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가 업체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관음동 공영차고지 입주 기준으로 업체 대형화를 꾀하는 등 업체 통합을 유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손실분을 무조건 지원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업체들의 자구노력이나 경영체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도 전무하고,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관리감독과 점검, 평가 체계도 빈약하다는 것이다. 버스 운행 기준과 서비스 수준, 효율적인 운행에 관련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북도, 한명구 사무관 대통령표창 수상

_ 우성덕취재팀장

한 사무관, 산림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제8회 산의 날 기념, 산림문화와 휴양증진에 기여한 공로 인정''산림분야에서 역대 전례 없는 백두대간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경상북도와 산림녹지과 공무원들을 대신해 상을 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숲속의 도시' 구현과 대국민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경북도 산림녹지과 한명구(52) 사무관(휴양정관 담당)은 제8회 '산의 날(10월 18일)'을 맞아 산림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시상을 주관한 산림청은 한 사무관을 산림문화와 휴양 증진 등 산림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한 사무관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2300억원),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3266억원), 낙동정맥 트레킹로드(2000억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경북도의 산림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생태관광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썼다. 이를 위해 그는 산림문화, 휴양,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고 산림문화행사도 개최, 산림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주춧돌을 놓았다. 또 1시군 1휴양림체제 구축, 산촌생태마을조성, 도시숲과 가로수 조성, 지역생태숲 및 수목원 조성, 산림박물관 운영지원 등 산림시책을 맡아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해 계절별로 다양한 산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추진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백두대간프로젝트 적극 개발 추진, 산림문화서비스 구축에 앞장

그는 우리나라 생태축이자 산림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백두대간 사랑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각종 산림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경북 도민을 위한 숲 문화 축제'를 개최했고, 올해도 '제8회 산의 날 행사'와 연계한 경북산림 문화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축제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시군단위와 산촌별로 산림문화축제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숲 해설가 양성 등 경북지역의 '산림 르네상스'를 펼쳐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수목원코디네이트,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등산안내인 등을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촌생태마을 등산로 등에 배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해 국민편익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경북북부 백두대간을 부가가치 높은 생물산업기지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한 백두대간프로젝트도 추진, 산림문화와 경제 활성화란 시너지 효과 발생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로 인해 경북도가 최근까지 유치, 조성해 운영 중인 산림문화, 휴양시설이 국립 자연휴양림 6곳, 공립 자연휴양림 12곳, 사립 자연휴양림 1곳 등에 이른다. 또 안동호반, 포항 비학산, 김천 수도산, 영양 반디불이, 고령 성주봉, 고령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등 6곳을 신규 조성 중이며 2012년까지 경북도내 1시군 1휴양림' 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동해안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도 2012년까지 영덕군 영덕읍 일원 300ha에 조성할 예정이다.

끊임없는 자기계발, 산림분야 전문가

그는 1985년도 88올림픽 대비 전국토 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해 도청 새마을지도과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내무부로 전출해 5년간 근무하고 94년 경북도 산림과로 전입해 다양한 업무 수행을 경험해왔다. 2007년에는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 정책에 따라 산림청에 파견 근무하는 등 중앙과 지방, 일반 행정과 산림분야 등을 두루 걸친 남다른 경력을 지니고 있다.

한 사무관은 업무와 관련된 자기 계발을 위한 노력도 아까지 않았다. 또 업무와 관련된 조경기사, 산림경영기사 등 국가자격을 취득해 한국조경학회, 조류학회 및 전통조경학회에 참여하는 열정을 보였다. 월간지'환경과 조경'을 창간호부터 최근까지 정기 구독함과 함께 산림조경 관련 각종 국내외 전문서적을 탐독, 공직자로서 전문성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 사무관은 "각 시군단위와 산촌별로 산림문화축제 갖기, 숲해설가 양성 등 '산림 르네상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분야 우수정책 잇따라 발굴

정부에서는 경북도 산림정책을 모범 사례로 꼽힌 경우가 많았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대표적이다. 72가구에 145명의 주민이 사는 경북 예천군 상리면 용두리는 2002년까지는 주민 대부분이 배추와 고추, 호두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전형적인 시골마을 가운데 하나였다. 2002년 '산촌생태마을'로 선정되면서 13억원이 투입돼 생활환경이 바뀌고, 표고버섯재배시설, 저온저장고 등 산촌 특용작물 생산으로 농업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했다. 이에 경북 북부의 한 산촌마을에 불과했던 이곳을 불과 7년 만에 가구당 평균 소득을 3배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산촌생태마을 선정 당시 1천200만원에 불과하던 가구당 연평균소득이 작년에는 4천만원대까지 올라가는 등 부자농촌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로 인해 산림청으로부터 2년 연속 '우수 산촌생태마을 조성, 경영부문 평가'에서 경영부분 우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경북도는 녹색일자리 창출에 있어 연간목표 대비 고용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활용한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산림병해충 조기 예찰·적기방제 시스템 운영′ 등은 지역 특성을 살린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지자체, 청소대행업체와 계약방식에 따라 비용 큰 차이

환경부 계약 구조 개편 나서

지자체마다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 방식에 따라 예산 비용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대 수와 쓰레기 발생량이 훨씬 적은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 혈세 낭비란 지적을 받고 있다.

1 광주 남구 34억 9천만원 vs 대구 동구 10억 8천만원

지난해 광주 남구(75세대)는 총 6만 4000t의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34억 9천만을 청소대행업체와 계약했다. 반면, 대구 동구는 작년 10만 7000t의 쓰레기가 발생했지만, 청소대행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10억 8300만원이었다. 쓰레기 발생이 훨씬 적은 광주 남구보다 3배나 적은 비용이다. t당 처리비용도 광주 남구는 14만 1000천, 대구 동구는 5만원으로 3배 이상 많았다.

이처럼 세대 수와 쓰레기 발생량이 훨씬 적은 광주 남구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은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 방식 때문. 광주 남구는 특정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한 반면 대구 동구는 공개입찰 방식을 택했다. 특정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하면 비용 부담 증가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저하,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 차단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32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76%에 달하는 177개 지자체에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 청소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8개 지자체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계약 기간도 길게는 40년, 평균 12년 이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일을 맡기고 있어 예산 낭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

2 환경부, 계약구조 개편에 나서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 구조 개편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자체 청소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청소비용 가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해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야 한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실적 평가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해 기준 미달 업체는 교체해야 된다. 대행실적 평가는 평가일로부터 3개월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와 함께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

경쟁입찰제 도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업체 반발과 환경부 입장

지자체 반발	환경부 입장
▶환경미화원 고용불안이 가중됨.	▶입찰조건에 환경미화원 고용승계를 명기하도록 한 사례도 있음. 행정지침 마련으로 해결 가능.
▶대규모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중소업체가 연쇄 도산할 수 있음.	▶이미 청소 노하우를 쌓은 기존 업체가 입찰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먼 곳에 있는 업체가 지자체 영업권을 딸 경우 하도급 방식으로 영업할 우려가 있음.	▶대행업체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 예정.
▶한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다른 지자체로 섞여 들어갈 우려가 있음.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계약해지 등 강하게 징계할 예정. 또한 수도권 외 지자체는 대부분 자체 공공처리장이 있어 현실적으로 반입될 가능성 낮음.

자료: 환경부와 각 지자체

3 청소계약대행, 관할 지역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능해져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영업구역 확대' 부문이다. 정부는 특정 청소업체의 장기간 독점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청소업체간 경쟁체제 확보를 위해 영업 구역 확대를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역지자체 안에서는 어떤 청소대행업체라도 관내에 상관없이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청소대행업체가 기초지자체와 계약하려면 반드시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했다. 예를 들면 대구 동구와 청소대행업무 계약할 수 있는 업체는 주소지를 동구에 두고 있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구 안에 있는 어떤 구와도 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세 청소용역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쟁 체재로 전환될 경우 대규모 자본을 가진 업체들만 시장을 잠식해 영세업체들은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영세업체들이 많은 청소용역업체 특성상, 쉽게 대형 업체에 잠식당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진출로 인해 영세 상권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비유된다. 한 청소용역업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없는 업체들은 당연히 시설과 장비 등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데, 공개입찰경쟁으로 진출이 자유롭게 허용되면 대규모 자본을 가진 업체들의 시장 장식이 뻔하다"고 말했다.

4 대형 청소업체들 진출 기회 넓어져, 영세업체들 강력 반발

이번 개정안으로 영세업체들은 대규모 자본을 가진 업체들의 청소시장 진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돈 되는 사업' 이란 전망이 나오면 대기업의 청소시장 진출도 점쳐질 수 있다. 또 공개경쟁입찰도입으로 인해 청소대행업체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잦은 업체변경과 함께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낙찰 업체의 하도급으로 전락하는 등 청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낳을 것이라 분석도 있다. 실제 대구시 동구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했다가 처리업체만 18개나 생겨났다. 하지만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3군데만 선정되는 바람에 5개 업체는 도산하기도 했다. 나머지 10개 업체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로 업무 영역을 돌렸다. 여기에다 영세 청소업체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반시설 투자를 기피하면 경영부실과 도산으로 연결되고, 이는 또 실직자 문제 및 노사관계 악화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 한 청소업체 관계자는 "동구에 있는 업체가 수성구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때 빠른 수거를 요구하는 민원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업무의 경계영역이 넓어지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연 2.0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 2월부터 2.00%로 인하된 이후 3월부터 8개월째 동결됐다.이는 국내외 경기 회복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민간부분의 경기회복을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

최근 부동산시장의 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환율하락도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게 된 계기가 됐다. 소비자 물가도 아직 낮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던 초저금리 정책기조를 수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크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낮은 수준인 현재의 정책금리를 일정한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자산가격의 움직임도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도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가격상승이 둔화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주 등 일부 신흥시장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한은의 정책기조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총재는 "현재 수준의 금리는 상당히 완화적인 정도이고, 금리 인상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다"며 금리 인상의 시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하지만 "지난달 금통위에서의 발언이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며 당장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회복세 불구 확신도 이른 상황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금융 위기 이후 경기 상황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보다 2.6%로 증가했고, 3/4분기 GDP도 1%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광공업생산도 지난 8월 전년 동월대비 1.2% 증가해 두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8월 광공업생산이 전월보다 1.3% 감소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9월 중 수출이 작년 동기대비 6.6% 감소하는 등 수출 감소율은 오히려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0% 이내로 둔화됐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회복은 아직 미진한 데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 등 경기의 하락 위험도 유효하다는 게 사실이다.

이는 금통위로 하여금 당분간 현재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에 주안점을 두는 통화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도 "실물경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고, 3/4분기에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수요변동이 있어도 기업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산조정이 수요보다 더 크게 변동했다"며 "GDP 증가율에서 나타나는 경제활동의 변화 정도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변화보다 지표증감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발 금리 인상 필요성 주춤

통화정책에 주요한 변수로 등장한 부동산 가격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그동안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정부가 지난 9월 초 실시한 DTI 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중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의 대규모 대출자산 양도 등으로 오히려 4천억원 정도 감소했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은행의 대출채권 양도분을 포함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은 9월 중에 2조4천억원 증가에 그쳤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8월에 2조8천억원 늘었고, 모기지론 양도를 포함하면 3조2천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규제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DTI 규제를 보험사와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했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하향 조정했다. 이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정책을 서두르지 않고, 경기 회복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있다.
이 총재도 "부동산 문제는 9월 중순 이후 가격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며 [redacted] 감독 당국에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내놔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되는지 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 발휘하면 통화 당국으로서는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 전환시점 고민. 만만치 않은 반대론

경기회복과 관련해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 세계 각국이 위기 국면에서 사용했던 비상조치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려있다. 상대적으로 경기가 견조한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의 전환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호주의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자산가격의 상승과 함께 과도한 통화완화 정책에 대한 정상화를 주요 배경으로 내세웠다. 특히 한국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 현재 기준금리가 2.00%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책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다.
한은이 현재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금융완화 기조라고 밝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성재 총재도 "지금의 기준금리 2%는 내년 성장률이라든가 물가 상승률, 시장금리에 비춰 볼 때 경기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강한 수준이고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금리 인상이 먼 훗날의 얘기는 아니란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은 여전히 출구전략으로서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은이 출구전략으로서 금리 인상 시행의 시기와 강도는 각 나라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고 결정도 통화 당국의 몫이라고 밝힌 바 있다.

MEDISON

You can Meet the MEDISON Technology All Over the World.

부도 맞은 메디슨 재기에 성공
세계 대표 의료기기 업체로 성장

1985년 창업한 메디슨(대표이사 손원갑)은 불모지와 같았던 한국 의료 시장에 한 획을 그은 벤처기업이다. 1990년대 후반 '벤처 붐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하던 메디슨은 2002년 무리한 투자로 자금 순환 고리가 끊어지면서 2002년 갑작스레 부도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부터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라졌다. 사장을 비롯해 전 임직원들이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 찾아가 직접 만났다. 전 세계의 고객을 직접 만나는 '맨투맨(man-to-man) 투어'를 시작했다. 심지어는 팔레스타인 난민촌의 병원까지 찾아가며, 안 가는 곳이 없었다. 제품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찾아가 점검을 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2006년 어렵사리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은 2002년 각각 1170억 원, 61억 원에서 2008년 2299억 원, 441억 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시장점유율도 2004년 9위(2.5%)에서 2007년 6위(7.2%)로 올라섰다.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네덜란드의 필립스 등 세계 유수의 기업과 싸워 이뤄낸 성과였다. 메디슨은 매출의 10% 가량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초음파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창립 20년여만 만에 부도 위기를 딛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의료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제품 80%이상 수출, 글로벌 경영체재 구축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메디슨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경영체제를 구축,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 나서고 있다. 제품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디슨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전세계 90개국에 10개의 현지법인, 100개의 대리점 망 등 갖추고 있다. 전세계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보다 신속히 공급하면서 초음파 진단기의 세계화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다. 이는 메디슨이 끊임없는 변화와 조직의 화합을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내렸고, 신기술 개발과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디자인 혁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제 메디슨은 성장의 근간이 되었던 초음파 기술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도약을 준비 중이다.

You can Meet the MEDISON Technology All Over the World.

»»» 기업탐방 _ 우성덕 취재팀장

세계적인 초음파 진단장비 업체인 메디슨이 대구에 둥지를 틀 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15일 메디슨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계기로 첨복단지 내 의료개발시설과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메디슨의 투자 유치로 의료산업 도약에 큰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메디슨은 초음파 장비를 넘어 종합의료기기 장비업체로 제2의 창업을 준비 중이다.

환경보전 이념, 사회공헌 가치 추구 메디슨은 환경영향 및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SO14001(환경경영 국제인증)에 의한 경영체제를 도입,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환경경영시스템을 통해 전 임직원이 환경측면의 영향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을 위해 연구 개발, 구매, 저장, 생산, 판매, 서비스, 폐기 등 전 사업영역에서 유발되는 환경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회수처리 정책을 통해 폐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자재의 사용 및 재활용 활동에도 심여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품생산에 있어 친환경자재를 사용, 각 자재 및 물질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각 제품의 recycling manual을 발간해 폐제품의 분해방법, 재활용가능자재 선별, 회수처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부품, 원자재, 제품에 대해 무게 및 재활용률을 관리 중이다. 이외에도 메디슨은 EU RoHS 2002/95/EC(납, 카드뮴, 수은 등)에서 제외대상이나 법규에서 제시한 6대 유해물질규제의 만족과 친환경제품 생산을 목표로 엄격한 유해물질 관리 규정 및 생산 체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메디슨은 국내외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의료기기 기증 사업과 문화창출 사업 지원, 인재 양성 장학금 후원, 결손아동 돕기, 심장병 어린이돕기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역할 수행에도 힘을 쏟고 있다.

메디슨 헬어케어 출범, 제2의 창업 선포 제2의 창업을 선포한 '메디슨'은 종합의료기기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메디슨은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자회사인 '메디슨헬스케어'의 출범식을 가졌다.
메디슨 헬스케어는 기술력 있는 국내 의료기기 벤처 회사의 해외 판매 교두보 역할을 맡으면서 비초음파 영역의 제품을 발굴, 국내외에 '헬스케어 토털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MRI와 골밀도측정기 등 비초음파 영역의 전략적 인수 및 제휴 등도 사업 검토 대상이다. 메디슨은 이를 통해 사업영역을 초음파 진단기기에서 의료정보, u-헬스케어 등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08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1,700여개 국내 의료기기 업체 중 100억원 이상 생산업체는 42개사, 1천만불 이상 수출업체는 18개사, 종업원 300명 이상 업체는 3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메디슨헬스케어는 메디슨의 해외 판매망을 적극 활용해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해외 판매를 맡는데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메디슨이 구축해 놓은 전 세계 100여개의 해외 판매망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 확대와 성장의 교두보를 마련, 의료기기 산업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된다.
메디슨의 손원길 대표는 "지난 24년간 축적된 메디슨의 해외영업 인프라와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회사의 수출확대를 제고 하겠다"며 "메디슨이 초음파 진단기기 전문기업에서 종합의료기기 회사로 변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2년 매출 5억불 목표... "세계초음파시장 3위 도약" 메디슨은 이번 메디슨헬스케어 설립을 통해 오는 2012년 매출 5억불, 영업이익률 3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자본금 50억원으로 출범한 메디슨헬스케어의 매출목표는 2010년 550억원, 2011년 900억원이다. 메디슨은 지난해 1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15% 미만에 그친 경쟁사 평균 영업이익률을 압도했고, 매출액 2천299억원, 영업이익 441억원을 기록, 최전성기였던 지난 2000년에 달성한 매출액 2074억원, 영업이익 62억원을 훨씬 뛰어넘었다. 현재 메디슨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8%로 세계 초음파 시장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메디슨이 2012년 목표를 달성하면 세계초음파 기기 시장에서 3위 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손 대표는 "오는 2011년 5월쯤에 거래소와 해외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라며 "이는 자본조달 뿐 아니라 해외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투명한 기업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법규 _편집국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 없앤다

정부 중앙부처가 남은 기본경비를 연말에 마구잡이로 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 기본경비는 기자재 교체비, 정책연구비, 인쇄비 등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이월범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상 기본경비의 5%를 초과해 이월한 부분은 국고로 환수토록 돼 있어 기본경비가 많이 남은 부처의 경우, 이월범위를 5% 이내로 맞추기 위해 연말에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연기금 등 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재정정책 자문회의 논의를 생략하고, 민간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투자풀 운영위원회 논의로 단일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시행령도 실시한다.

매출액 200억 이상 외부감사 의무화

내년부터 연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의 업체는 무조건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의무적용 대상이 상장사와 비상장 금융회사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매출액 200억원 이상 ▲부채규모 100억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만 외부감사 대상이었다. 외감 대상 기업은 현행 외감 대상 기업은 현행 1만6,000개사에서 1만6,600개로 600개사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모든 금융회사들이 IFRS를 도입해야 하지만 상호저축은행, 리스신기술, 할부금융사의 경우 의무도입 대상이 상장사로 제한된다. 특수법인으로서 해당 규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등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IFRS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011년, 수출입은행은 2012년, 농협과 수협은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IFRS를 도입하게 된다.금감위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 피해구제 쉬워진다

허위과장 표시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훨씬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과장 표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돌렸다. 또 소비자가 손해액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표시광고로 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손해가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과실이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았지만 손해액 산정 등 절차가 까다롭고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피해구제가 쉽지 않았다.

싸이버-세종대학교 홍보동 아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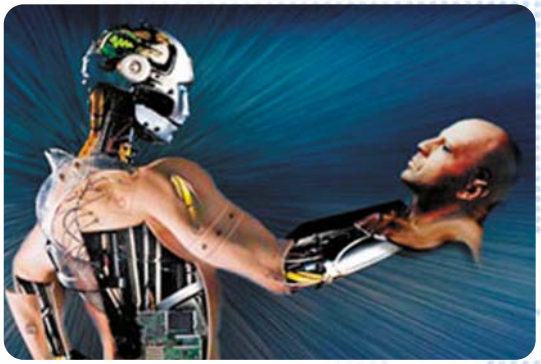
》》》
이슈
&
이슈
_ 편집국

세종시 문제로 연일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행정의 효율성을 들어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거나 아예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세종시 원안추진을 약속했고,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여야간의 정쟁에 그치지 않고 지역 대결구도까지 치달으면서 국론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참여정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의 줄임말로 참여정부 시절,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사업이다. 여야는 지난 2005년 합의를 통해, 정부부처 12부4처2청(현재 9부2처2청)의 충남 연기군 일대로의 이전을 골자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세종시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세종시는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면적 223.77㎢)에 2015년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중앙행정, 문화, 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기능 등 6개 주요 거점 기능을 분산 배치해 자립자족형 생태도시로 만든다. 부지 활용은 주거용지(15, 331천㎡), 상업업무용지(1,478천㎡), 산업용지(803천㎡), 공원녹지용지(38,597천㎡) 등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2030년까지 22조원 가량이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에는 이미 토지보상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착공이 진행되고 있는 등 현재까지 5조 원을 투입돼 공사가 한창이다.

정부와 여권, 세종시 원안 불가 입장 밝혀 여권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비롯해 '백지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전면 백지화에서 정부부처 이전 축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대안들을 볼 때 어떤 형태로 수정이 되건, 여권이 '행정부처 이전(세종시 원안)' 만큼은 빼고 가자는 의견에 일치는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야당의 극심한 반발과 충청 민심의 심각한 이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고, 박근혜 전 대표도 원안 추진를 지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행정부처 이전 대신 교육과학, 대학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녹색성장 중심 도시 등의 주장도 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천 송도경제특구를 모델로한 세종시의 경제자유지역 지정과 같은 방법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법 개정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이전 부처 대폭 축소안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일부부처만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세종시 특별법 개정이 아닌 '행정계획 고시' 변경만으로 수정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유한식 연기군수가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충청권 민심은 폭발하고 있고,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공은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에 달렸다.
정부는 세종시 건설 문제와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연내에 세종시 건설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만간 세종시 건설 계획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리뷰_ 편집국

대구 첨복단지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비 17억원, 과다 논란

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마스터플랜과 액션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발주한 용역계약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첨복단지 마스터 플랜 및 액션플랜 구상을 위해 미국의 경영전략컨설팅사인 '모니터 그룹'과 대구의료단지 조성계획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시는 첨복단지 공동예정지인 충북 오송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발빠른 대응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모니터 그룹은 미국 하버대 경영학교수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자문위원인 마이클 포터(Michael Eugene Port)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문희갑 전 대구시장 시절,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 용역도 수행한 경력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니터 그룹은 또 중국 상해 푸동 국제의료특구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으로 당시 상해시는 200만달러의 용역비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를 통해 오는 11월과 12월 예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본계획과 단지조성계획발표에 앞서 예산 배정과 사업확정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계산이다.

대구시측은 "국내 메이저 연구기관에 의뢰할 것도 검토했지만, 대구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구상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예산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의료클러스터 분야에 경험이 많은 모니터 그룹에 맡겨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받아볼 계획" 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2009년도 예비비 예산에서 약 17억원을 사용해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하지만 시의 첨복용역추진과 관련해 관련단체나 학계 등에서는 연구 용역비가 지나치게 많고, 용역수행 기간도 예산에 비해 최장 3개월에 불과해 결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11월과 12월로 예상되는 정부계획에 앞서 예산 배정과 특화된 사업을 확정 받아도 늦지 않지만, 대구시가 무리하게 용역계획을 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용역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고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에 비해서도 용역비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배정 등에서 유리한 논리를 개발하려면 지역실정에 밝은 국내기관에 의뢰해도 3억~5억원 이내면 충분한 것 같다" 고 비판했다.

또, 올해 예산이 끝나고 첨복단지 운영법인체가 구성되면 제대로 된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의료단지가 국내외의 경쟁이 아닌 전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글로벌 마인드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모니터 그룹은 첨복 유치제안서 작성 당시부터 자문을 받아왔기 때문에 3개월 내 용역결과를 도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되풀이되는 국감 관행, 개선돼야

_ 편집국

국회가 지난 10월 5일부터 20여일간 200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은 4대강 정비사업, 세종시 등 논란이 뜨거운 정책이 많아 날선 공방이 연일 이어졌다. 민주 등 5개 야당은 이러한 이슈들을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비판했고, 반면 여당은 '끌어안기'로 맞섰다. 특히, 이번 국감은 10.28 재보선까지 겹치면서 국감은 여야의 기싸움으로 번졌고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

국감, 정치 국감 행태 되풀이

국정감사는 1988년 부활한 이래 올해로 22번째지만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정치 국감'의 행태다. 국정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국감'이 아니라 국감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증인채택 문제로 싸우느라 감사를 못하는 일도 있었고, 유관기관의 장관과 증인을 불러놓고도 감사는 뒷전이고, 설전만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국방위 감사와 같이 모범적인 감사도 있었지만,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대부분 구태의연했다. 아직도 검사나 되는 것처럼 정책에 관계없는 내용으로 장관과 증인을 신문하거나 장관을 질책하는 의원들은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감, 역기능으로 제 기능 상실해

1949년 첫 시행된 국정감사제도는 유신과 5공 시절을 거치면서 폐지됐고, 민주화 이후 다시 부활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과 국정 공개라는 순기능으로 여야가 올바른 국정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표였다. 국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 돼 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자료 제출을 요청해 피감사 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킨다거나, 여야 정파 간 대결을 초래하고 행정 각부 장관과 국회의원 간의 감정 대립을 격화시키는 각종 역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 후 처리 결과는 소홀히 한 채, 감사 과정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감사장은 큰소리 치는 국회의원들만 있을 뿐 시정을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국민 혈세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 국감을 진행했지만, 여야 합의를 하지 못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감사자와 피감사자 모두 달라져야 해

국회는 정부 통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국정감사권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기에 국회의원의 직무를 충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감사기관도 하루, 이틀만 버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호통치기, 눈치보기, 정치적 감사 대신 국익을 위한 정책감사에 역점을 두고, 수감자들도 잘못은 진솔하게 밝히고 쇄신대책을 내놓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구태식 국감에 식상해 있다. 한건주의 폭로, 포퓰리즘, 정치공세식 국감은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낡은 정치 국감의 형태에 변화와 혁신을 주문한다.

대구경북 집값 30개월만에 상승세 뚜렷 미뤘던 분양도 봇물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30개월 가까이 지속되던 아파트값 내림세가 조금씩 반전되며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가을 이사철과 부동산 경기 회복 심리까지 겹치면서 미분양 아파트도 속속 팔려나가고, 법원의 부동산경매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실상 신규분양을 접었던 건설업체들도 잇따라 신규분양에 나섰다.

내리막길 걷던 지역 부동산 시장, 활기 되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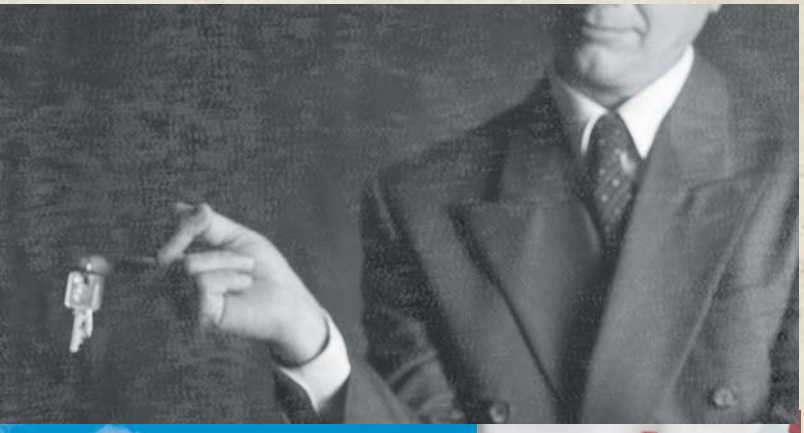
2006년 이후 계속 내리막을 걷던 대구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 전세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

칠곡 3지구의 경우 젊은 층 수요가 많아지면서 지난 3월보다 10% 정도 올라 매매호가가 79㎡형은 단지에 따라 1억~1억4000만원, 108㎡형은 1억8000만~2억3000만원대까지 형성됐다. 지난 2006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대구지역 집값도 지난 7월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최근 석 달 동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계약 상담 및 문의전화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준공한 대구 수성구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를 비롯한 일부 미분양 단지는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약상담 및 문의전화가 줄을 잇고 있고, 계약도 이어지면서 미분양 물량도 가파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역 아파트 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들어서는 풍림 아이원(512가구)의 경우 초기 분양률이 10% 정도에 불과했지만, 최근 2개월여 사이에 360여채의 미분양 물량이 팔려나갔다. 이 같은 회복세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통적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2~3년 전 과열을 걱정하던 상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아파트 시장이 서서히 온기를 서서히 되찾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 '최적기'라는 인식 퍼져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이 2년 뒤, 공급이 크게 딸릴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지난 침체기 동안 아파트 착공물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신규 공급이 줄면서 대구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2008년 3만여가구를 최고점으로 올해 1만 5,000가구, 내년 1만 2,000가구, 2011년 2,500여가구 등으로 줄어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3만3,779가구로 전 월(14만1886가구) 대비 6,407가구 줄었다. 이는 지난해 5월(12만8,170가구) 이후 최저 수준으로 올 3월 16만 6,000가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5개월째 감소세다. 특히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았던 지방 미분양도 11만4176가구로 전월(11만6,176가구) 대비 5,759가구가 줄어 지방 아파트시장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금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 매매와 미분양 물량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대구경북 아파트시장 회복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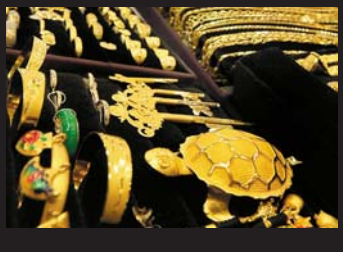
대구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1만7,920가구로 전월보다 553가구 감소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해서는 3,459가구 감소했다. 경북 역시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1만 3,582가구로, 전월 대비 361가구, 지난해 12월 대비 2,524가구 각각 줄었다. 내년 3월 입주 예정된 재건축 단지인 달서구 송현동 '상인화성드림파크' 2,420가구(일반분양 860가구)의 경우 올해 6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대거 소진됐다. 상인화성드림파크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6월 이후 한 달 평균 40~50채 정도의 미분양 물량이 팔려나가고 있고, 지역 아파트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과 경기가 차츰 안정될 것이란 전망으로 인해 구입을 미뤘던 사람들이 구매에 나서고 있다. 수성구 범어동 '삼성쉐르빌'(213가구)의 경우도 지난해 3월 초 54%에 불과한 이후 거의 판매되지 않았지만, 최근 분양률이 60~70%까지 높아졌다.

건설사, 신규분양 잇따라

건설사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지방 아파트 신규 공급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건설사들이 잇따라 신규 분양에 팔을 걷어 붙였다. 올 들어 10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구의 민간 아파트 신규 공급은 전무했다. 신규 공급의 첫 주자는 화성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산업은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경북 경산에 '사동 2지구 화성파크드림'(505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화성산업은 최근 단지 내에 실개천, 테마공원, 숲, 생태하천 등을 도입하는 등 자연친화적 환경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사동 2지구 화성파크드림을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로하스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곳은 전용면적 104㎡~130㎡, 505가구로 구성된 중대형 임에도 3.3㎡ 당 분양가가 인근 대구 수성구에서는 누릴 수 없는 570만원~630만원 수준이다. 특히 이곳은 교통신도시, 생활신도시, 교육신도시, 환경신도시, 비전신도시의 5박자를 모두 갖춘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수성구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는 계약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하면서 최근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시공사인 동일토건측은 우선 계약금 20%만 납부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계약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중도금 60%는 계약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동일토건이 직접 담보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이자는 2년간 회사에서 부담한다. 지난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는 9,422㎡(3만평) 부지에 119~257.85㎡형 1,411가구(16개동) 대단지로, 분양가는 3.3㎡당 975만원~1,290만원 수준이다.

ECONOMIC LIFE

금 가격이 치솟고 있다. 가을 결혼 시즌이지만 금은방에는 손님이 뚝 끊겼고, 예전처럼 특수도 사라졌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혼수예물로 금 함량을 낮추거나 간소화하는 실속파들이 늘고 있다. 생활경제 _이준혁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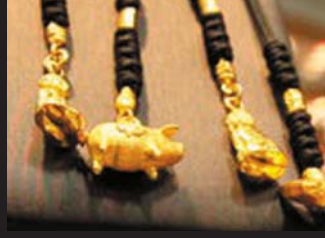
1 ECONOMIC LIFE
'치솟는' 금값에 금은방 된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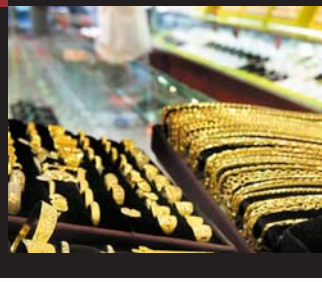
대구 교동시장 귀금속 골목. 손님 '뚝' 끊겨 최근 계속되는 금값 상승에 대구 교동시장 귀금속 골목 상인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200여개의 업체가 밀집한 지역 최대 귀금속 골목이지만 이곳에는 한적한 적막감만 돌았다. 오히려 금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귀금속 상가 한 주인은 "금값이 비싸지면서 장사 10년 동안 올해처럼 손님이 없는 적은 처음"이라며 "대부분의 가게들이 장사가 안 돼 폐업할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귀금속매장 한 주인은 "요즘에는 금붙이를 들고와서는 얼마 줄 수 있냐고 묻는 손님은 많아 졌지만, 사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순금 3.75g(1돈) 소매가가 무려 17만원을 넘는 등 금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가을혼수철 특수는 온데 간데 사라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금 시세가 요동을 치면서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값을 받기 위해 발품을 파는 사람들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귀금속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금 시세가 5월보다 최대 30%가량 오르면서 금시세 확인과 매도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특히 금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때문에 금 판매시점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라진 예물문화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예물 문화도 바뀌고 있다. 금값이 많이 올라 결혼 예물에 부담을 느끼면서 최대한 비용을 아끼겠다는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다. 얼마 전 결혼한 박종규(31)씨는 아내 될 사람에게 줄 커플링과 반지, 등의 세트를 구입하는데 100여만원의 비용을 썼다. 이씨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 결혼 예물이 큰 부담이었다"며 "예물비용을 줄여서 집 마련 비용 등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11월 결혼을 앞둔 이승형(31)씨도 "금값이 너무 올라 예물은 그냥 심플한 커플링만 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돈은 전셋집 마련 비용에 보태 썼다"고 했다. 이씨는 "주변에도 결혼하는 커플들 중에는 우리처럼 간단한 커플링만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결혼예물업체 한 관계자는 "금값이 불과 몇 년 사이에 3배 넘게 뛰면서 예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다"며 "예전처럼 예물에 수백만원을 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오히려 40-50여만원선에서 커플링만 하는 예비부부가 많다"고 말했다.

GOLD





2 ECONOMIC LIFE
장롱 속에 모아둔 금 어떻게 할까?

금 투자, 원 · 달러 환율 하락도 눈여겨 살피고 주의해야 금값이 오르자 '금'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는 은행의 '금 투자 통장'이 있다. 이 상품은 적금을 들듯이 현금을 넣으면 금으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은행의 금 통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마진 등을 떼지 않아 거래 비용은 실물 거래 때보다 적다. 그 밖에 금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금 펀드는 금 관련 지수나 금 관련 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등이 있다. 지난 9월 금 관련 회사에 투자하는 한 펀드는 최근 3개월 수익률이 무려 22%나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 투자가 유망해 보이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국제 금값 시세를 좌우하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또 실물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담도 있다. 이에 변수가 많은 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달러당 원화 환율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국내 금값은 국제 금 시세를 원화로 환산해서 표시하는데, 국제 금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면 원화로 주어진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최근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향후 추가 하락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금은 과거부터 주식, 달러 등 다른 투자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D증권 한 관계자는 "금값이 높다고 높은 수익을 좇기 위해서 금 투자에 '올인'하는 것은 변수로 인해 위험한 측면이 많다"며 "금은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금값 더 오른다. 로저스 회장 '5~10년 후 2천달러' 세계적인 상품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금값이 상승을 지속해 온스당 최고 2천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15일 로저스 회장은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지식포럼'에서 "1980년대 금값이 치솟았을 때 가격을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2천달러 가량 될 것"이라며 "지금은 같은 기준으로 1천500~1천600달러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5~10년 후가 되면 금값은 2천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금값은 최근 2개월간 급등세를 거듭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인 1천72달러까지 뛰어올랐다. 하지만 그는 "금을 갖고 있고 아직 팔 생각은 전혀 없지만, 가격이 치솟고 있을 때 섣불리 샀다가는 다칠 수 있는 만큼 지금 투자하려면 금보다는 은이나 백금류를 사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은은 예전에 기록을 세웠을 때보다 70%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 의성 3대문화권 사업, 향후 5년간 생산유발 효과 1조2000억원, 고용효과 1만5000명 기대

경북 의성군의 대규모 사업 프로젝트인 3대 문화권 개발 사업에 윤곽이 드러났다. 의성군은 지난 9월초 용역기관인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으로부터 최종보고회를 갖고 오는 2013년까지 총 사업비 5천 263억여원을 들여 지역 문화, 생태, 녹색성장 등을 아우르는 3대 문화권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3대 문화권 개발 사업은 정부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개발 사업과 연계해 '조문국 문화권 개발사업', '낙동강, 비봉산 문화·생태개발 프로젝트', '녹색성장 클러스트'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조문국 문화권 개발사업은 ▲화산, 공룡, 생태 등 자연학습시설 700억원 ▲에코 트레킹로드 등 생태탐방시설 100억원 ▲토기촌, 예술촌, 저자거리 등 역사문화시설 800억원 ▲민물고기관, 태양타워, 생태공원 등 생태관광시설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낙동강, 비봉산 문화·생태개발 프로젝트는 ▲옛성곽복원, 등산로정비, 전망타워조성 등 전통화전놀이 조성에 320억원 ▲대곡사정비, 조각공원, 인물공원,수석공원 등 대곡테마파크에 155억원 ▲사파리생태공원, 청풍루 정비 등 문화생태 루트화사업에 252억원 ▲왜가리전통생태마을 조성에 300억원 ▲의성대제지농업문화공원 조성에 200억원 ▲효 박물관 건립에 15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녹색성장 클러스트 사업에는 ▲세계연꽃연구단지, 허브생태공원 등 생태테마파크 조성에 100억원 ▲돌탑미로, 의상조사 법계도 등 불교문화공원 조성에 100억원 ▲천년송림자원화 및 의성선비길 조성에 70억원을 들인다. ▲국제씨름경기장, 씨름 연수관, 씨름 테마파크 조성 570억원 ▲야외공연장, 도민의 종각, 23개시군 풍물관에 34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이번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의성군은 향후 5년간 1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50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 이준형 총괄이사는 "의성군은 지리적으로 경북의 중심에 위치한 만큼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신성장 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은 물론 녹색성장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잘사는 선진복지형 농촌을 건설하는데 전 행정력을 올인해 간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 영천시 고경면 오룡리 '누에치는 마을'에 양잠을 관광 자원화하는 '양잠테마공원'이 들어선다.

경북 영천시는 지난달 2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용역의뢰기관인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으로부터 중간보고회를 갖고 '누에치는 마을'에 양잠테마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누에치는 마을은 29농가가 29㏊의 면적에서 뽕나무을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20t의 누에로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 이 마을에는 길이 25m, 높이 3m, 폭 3m 규모의 누에 모형의 누에체험학습관이 조성돼 있어 올해 4만여명의 체험 관광객이 다녀가기도 했다. 시는 양잠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올 7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으며 다음달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예산확보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국비와 지방비 120여억원으로 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의 특화사업으로 지정받아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기반시설로는 오디뽕밭조성과 가공공장 건립, 양잠전시관 건립, 누에 및 오디 체험시설, 테마팬션, 향토음식관을 비롯해 모노레일, 사계절 썰매장 등을 계획 중이다. 이밖에 뽕밭산책길과 연결된 금광탐사코스 개발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기획연구원 관계자는 "양잠 관광 자원화를 위해 매년 늘어는 관광객의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이 오래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 개발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검토해 최종 사업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앞으로 누에관련 기능성 제품 다양화와 상품 질 향상,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잠테마공원조성 사업을 통해 전국 최고의 양잠 관광시설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Policy

지자체는 지금

_우성덕 취재팀장

동촌유원지, 대규모 생태테마공원으로 탈바꿈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일대가 대규모 생태테마공원으로 꾸며진다. 대구시는 지난달 초 40년 이상 노후돼 외면받고 있는 동촌 유원지 일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포함돼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실시 설계를 마무리 중이며 이달말께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대구시가 사업시행을 전면 위탁받아 내년 2월까지 전 구간에 대한 공사에 착수한다. 시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동촌유원지 구름다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금호강의 상징적 랜드마크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에는 총 사업비 2천594억원(공사비 1825억원, 보상비 769억원)을 투입, 금호강 41.4km 전 구간에 걸쳐 하천 고유의 이치수 기능 강화는 물론 생태환경 개선, 수변 친수공간 조성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동촌유원지 일대는 6만5000㎡의 수변공간을 하천생태원, 다목적놀이마당, 수변무대, 접안시설, 생태수로 등으로 구성된 수준 높은 생태공원으로 변모시켜 금호강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된다. 또, 항구적인 홍수대비를 위한 하상준설과 함께 4개소의 가동보를 신설 또는 개량해 충분한 수량과 수준 높은 수변경관을 확보한다. 또 최소 수심 1.8m 이상을 유지해 유람선, 수상스키, 카누, 조정 등 다양한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경주~포항 관광벨트, 형산강 '생태탐방로' 개발 4천500억 투입

경주와 포항을 연결하는 형산강(63km)이 생태탐방로(에코트레일)로 개발된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4천 538억원을 들여 해양레저, 문화경관, 자연생태, 문화레저, 산악역사 등 5개 축을 중심으로 한 에코트레일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4개 테마별 관광인프라 개발(2천832억원)을 비롯해 포항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경주 플로팅 실크가든 등 13개 연계 거점을 묶어 관광인프라(1천706억원)를 조성한다. 14개 테마는 ▲해맞이길(환호해맞이공원-동빈내항) ▲향구길(동빈내항-연일대교) ▲섬안길(해맞이공원-포항도심-형산강) 등 해양레저축을 바탕으로 한 탐방로 ▲보부상길(연일대교-아랫부조) ▲새빛길(아랫부조-임곡리-남천-생태습지) ▲용천길(형제산-양동마을) ▲큰스님길(운제산-보문) ▲어귀길(형산강-양동마을) ▲목락길(옥산리-옥산서원-독락당) 등 문화경관축을 기반으로 한 탐방로가 개발된다. 자연생태축은 ▲구비길(안강읍 갑산리-현곡면 나원리), 문화레저축인 ▲하늘길(현곡면 가정리-금장리) ▲여명길(황성동-천군동), 산악역사문화축인 ▲금모래길(남천-불국사) ▲곡수길(포석정)이 조성된다. 이외에도 포항은 ▲형산강 생태관광 습지공원 ▲포항 아트웨이 ▲환호해맞이공원 피어 및 수변공간을 개발하고, 경주권에 ▲부조장터 문화공원 ▲경주개 동경이 테마파크 ▲전통 나루터와 양동마을 유교서당 ▲형산강 역사생태박물관을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포항과 경주 연결권에는 ▲자전거헬스놀이터 ▲환경생태 수변수목원 ▲동학·무녀도 역사탐방공원 ▲최부자 노블리스 오블리제 테마공원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인간미가 넘치는 진취적 리더
엄 태 수 사장

▶ 엄 태 수
(주)SMS EDU 대표이사

엄태수 사장은 기업인이다. 20여년 동안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온 분이다. 기업가로서 회사 경영을 위해 산전수전을 다 겪었을 것이다. 그것도 사업하기 참으로 힘든 지방에서 말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을 잘 근사해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다. 엄 사장은 여느 다른 기업가처럼 오늘도 회사를 위해 고전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기업가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를 아는 사람은 그에게 매료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기업가 냄새 가 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극한생존의 세계에서 회사를 경영하다보니 정신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흉금을 털어 내놓고 만나기도 어렵다. 그런데 엄 사장은 항상 표정이 밝고 매사에 여유가 있어서 처음 만나는 사람도 오랜 만남을 가져온 사람 대하듯이 편안하게 해준다. 어떠한 대화를 해도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든다. 상대가 무엇을 제안하면 이를 경청하면서 늘 "한번 해봅시다", "이점을 고려하면 할 수 있겠네요. 추진해봅니다"라는 말로 호응을 해준다. 엄 사장을 만난 지가 3년이 되어가지만 한번도 "힘들다", "안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참으로 본받고 싶은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엄 사장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일이라면 매사에 적극적이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요즘 대안교육과 로컬푸드를 추진하고 있는 간디문화센터의 이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고, 시민운동가, 풀뿌리단체 등을 지원하는 대구시민센터 부이사장을 맡아 정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분권혁신아카데미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다양한 교육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그가 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평소 공익을 위한 무한한 열정과 사업추진에 따른 뛰어난 판단능력을 보여준 그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엄 사장은 기업가정신과 시민운동가마인드를 동시에 가진 보기 드문 인물이다. 우리가 시민사회의 경계 안에서 행동하고 있을 때 그는 경제계를 넘어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늘 차림새가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를 가진 사람, 한번 판단이 서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사람, 로컬푸드 사회적기업가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 엄 사장을 통해 살맛나는 대구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이 창 용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

고객감동의 가치추구
에코가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교육컨설팅 /Education Consulting
리더십, 역량개발, 기타 교육컨설팅

리서치 /Research
여론조사, 시장조사, 만족도 조사

학술연구 /Scientific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경영평가

자산관리컨설팅 /Asset Management Consulting
부동산, 주식, 금융, M&A투자컨설팅

(주)에코 대표전화 : 1644-1368 | TEL : 053)766-1368 | FAX : 053)766-1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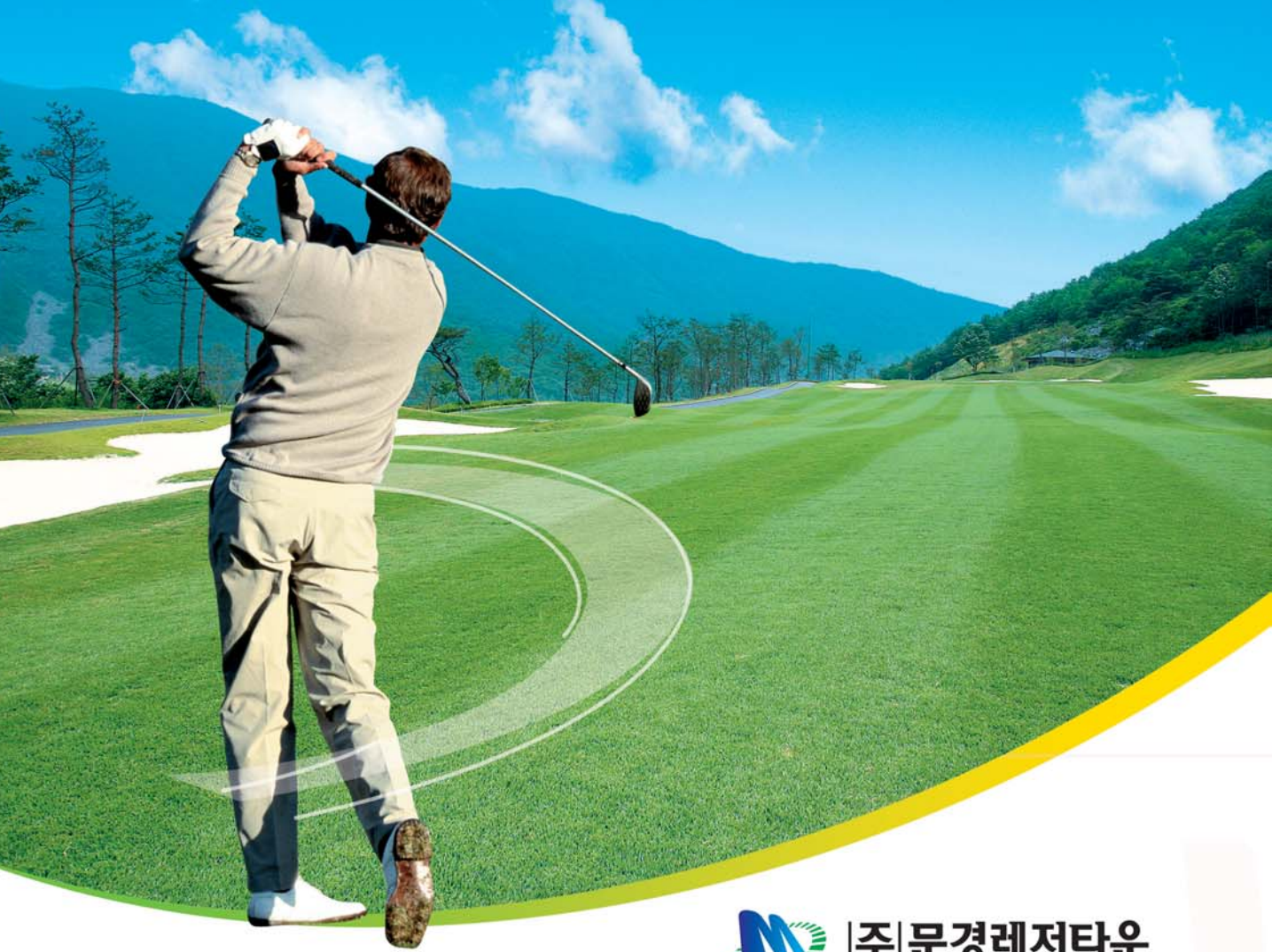
Anyone, Anytime 문경골프장

정규18홀대중골프장

문경GC

백두대간 자연속의

가까운 곳, 저렴한 비용, 편안한 라운드
천혜의 자연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문경레저타운
Mun Gyeong Leisure Town Co., Ltd.
경북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산1-1
예약안내 : 054-550-5005 | 팩스 : 054-572-3103~4 | 홈페이지 : www.mgle.co.kr